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2014. 4. 25

No. 2014-15

독일 통일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한반도 통일 외교

연구부장 신성원

1. 문제의 제기

- 이 글은 독일 통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고, 독일 통일 전개 과정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 등을 파악해 보기 위한 것임.
- 1990.10.3 독일 통일과 1991.12.25 소련의 붕괴는 놀라운 20세기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20세기에 독일이 통일될 것이라고 기대한 독일인은 없었음.
 - 독일은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이하였는데, 동구 공산 정권이 연쇄 혼란에 처한 상황에서,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동독 이탈 상황이 발생하여 통일 과정이 시작된 것임.
-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통합 추진 속도, 대외 관계를 관리할 메카니즘 구성 문제('2+4')¹⁾, 통일 독일의 NATO 잔류 문제, 동독 주둔 소련군 철수 문제, 폴란드와의 국경선 문제 등이 현안이었음.
- 역사적으로 독일은 천년 이상 분열 상태를 유지해 왔는데, 프랑스 나폴레옹 이전 독일은 350개 공국과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신성로마제국의 일원이었음.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독일 통일 전개 과정
3. 독일 통일에 영향을 미친 요인
4. 한반도 통일 외교
5. 정책적 고려 사항

1) '2+4': 동독, 서독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2차 세계대전 전승 4대국이 참여하는 통일 독일 과정의 대외관계를 관리할 협의 메카니즘

서독 보수당
헬무트 콜 총리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독일 통합에 대응하여
유럽 통합의 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독일 마르크화를
포기하고
유로화 도입을 제안하여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을
설득했으며...

대한민국은
고구려, 통일신라 이래
유구한 역사 기간 동안
통일을 지속 유지해온
국가였는데,
현재의 한반도 분단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므로
한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재차 통일 국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 과정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

- 1815년 비인회의에서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하고, 분열된 독일을 만들었는데, 이후 독일은 프러시아 비스마르크 (Bismarck) 주도하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1871.1.18 통일을 완수
- 중부 유럽에 강력한 통일 국가(독일) 출현에 놀란 프랑스와 러시아는 독일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었으며, 영국은 독일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경계함.
 - 통일 상태에 있었던 75년(1871-1945년)동안 독일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 유럽을 파국으로 몰아넣었는데, 이처럼 독일 문제는 역사적으로 유럽 국가들에게 골칫거리
- 서독 보수당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프랑스 미테랑 (Francois Mitterrand) 대통령이 독일 통합에 대응하여 유럽 통합의 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독일 마르크화를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하고, 유로화 도입을 제안하여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을 설득함.
- 1945.6.5 베를린 선언과 1945.8.2 포츠담 선언으로 2차 대전 승전 4대국이 독일에 대한 최고 권한을 수임한 이래, 1990년 9월 승전 4대국은 그들의 책임을 포기하고 통일 독일 국가의 창설을 축하함.
 - 유럽의 분단은 독일의 통일로 치유되었으며, 유럽 냉전은 종식 되었고, 유럽 전체가 자유롭게 되었는데(Europe was whole and free), 9.26 뉴욕에서 2차대전 승전 4대국이 권리 중단 선언문에 서명하였으며, 1990.10.3 독일 통일이 완료
- 대한민국은 고구려, 통일신라 이래 유구한 역사 기간 동안 통일을 지속 유지해온 국가였는데, 현재의 한반도 분단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임.
 - 한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재차 통일 국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 과정을 잘 준비할 필요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통일이 실현될 경우 동북아 중심국가가 될 수 있으며, 주변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이므로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질서가 형성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남북한의 안보를 보장

하고 있지만,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을 과도하게 기대해서는 안 됨.

-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한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음.

2. 독일 통일 전개 과정

가. 동독 내 정치 상황 및 소련-동독 관계

- 1988년 당시 동독 공산 정권은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었는데, 1989년 7월 동독을 방문한 영국인 티모시 가튼 애쉬(Timothy Garton Ash, 동독 문제 전문가)는 “동독 내 반체제 인사들이 상황을 매우 낙담하고 있다”면서, “동독 국가보안국(Stasi)은 여전히 강력하고, 동독 시민들은 비교적 괜찮은 경제 여건에 큰 불만은 없으며, 동독 내 반체제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서독으로 망명함에 따라 동독 내 반체제 세력이 약화되고 있어 동독이 조만간 붕괴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평가함.
- 동독 반체제 인사들이 주도한 세 차례 데모(1987년, 1988년, 1989년)가 별 저항없이 진압되었으며, 동독 지도자들은 1989년 수개월간 동구 지역에서의 폭발적 정치 불안 상황을 잘 견뎌냄.
 - 오히려 동독 정권 내에 위협 요소가 있었는데, 동독 집권 통일 사회당(SED: Sozialdemokra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내 개혁주의자인 드레스덴 공산당 서기 모드로(Hans Modrow)가 고르바초프 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추진하려 했음.
 - 당시 동독 공산당 정치국 내에서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개혁 정책과 신사고(新思考)는 금기시된 주제였는데, 1988-89년 겨울 동독 정권은 소련 잡지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개혁 바이러스를 격리시키려고 노력
- 동독 공산당 호네커(Erich Honecker) 의장은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Nicolae Ceausescu) 의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폴란드와 헝가리는 자유선거를 준비하였음.

1988년 당시 동독 공산 정권은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었었는데, 1989년 7월 동독을 방문한 영국인 티모시 가튼 애쉬 (동독 문제 전문가)는 “동독이 조만간 붕괴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으며...

동독 공산당 정권이
여전히
강력해 보였지만,
고르바초프
신사고 정책은
점차 동독 정권에
타격을 주었고,
이데올로기가
동서독을
분단시킨 이유였는데,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독일이 분단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
점차 현실이
되었으니까...

- 동독 정권이 1989년 5월 지방 선거에서 98.85% 지지를 획득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동독 내 반체제인사들과 교회 선거 감시단의 비난이 빗발쳤으며, 부정 선거 반대 데모가 있었는데, 동독 정보기관은 오히려 강경 진압
- 1989년 6월 동독 의회는 중국의 천안문 사태 무력 진압을 지지
- 동독 공산당 정권이 여전히 강력해 보였지만, 고르바초프 신사고 정책은 점차 동독 정권에 타격을 주었음.
 - 소련 입장에서 동독 독재자 호네커의 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부담이 되면서, 소련과 동독 관계가 점차 소원
 - 소련 입장에서는 동독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늑고 병든 호네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점차 명백해 짐.
 - 1985년초 체르넨코(Konstantin Chernenko) 소련 공산당 서기장 장례식에 참석한 호네커 동독 공산당 의장에게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유치원은 끝났으며, 누구도 인도해 주지 않는다. 동독이 동독 인민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충고하였고, 이때부터 소련-동독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
 -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호네커 동독 공산당 정치국 의장에게 “소련은 변하고 있으며, 변화가 소련과 동독에게 모두 유쾌한 것만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련의 운명이며, 또한 동독의 운명이기도 하다”고 설명
- 수십 년간의 공산 통치와 확정으로, 동구권 국가 인민들의 공산 집권 세력에 대한 분노와 저항감이 점증함.
 - 이데올로기가 동서독을 분단시킨 이유였는데,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독일이 분단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 점차 현실이 됨.
 - 동구권 공산 지도자들은 자국민을 탄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소련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소련이 지원하지 않으면 동구 공산 독재 정권은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었음.
 - 1988년 말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소련 정부는 브레즈네프 독트린

(Brezhnev Doctrine)²⁾은 죽었다고 공공연히 언급

나. 동독인들, 헝가리·체코 통해 동독 탈출

- 1989년 3월 네메츠(Miklos Nemeth) 신임 헝가리 수상이 취임하였는데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하는 인사였음. 네메츠 수상은 헝가리를 통해 오스트리아(서방)로 가기 위해 동독을 탈출한 동독인들에게 헝가리 국경을 개방하는 결단을 내렸는데, 베를린 장벽 붕괴의 서곡이었음.
 - 서독은 이러한 결단을 내린 헝가리에 5억 마르크(DM) 규모의 경제 지원을 했는데, 1989년 9월까지 약 4만 명의 동독인이 헝가리를 통해 서방으로 탈출
- 1989년 수천 명의 동독인들이 체코 주재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가 서방으로 보내달라고 주장했는데, 뉴욕 유엔총회 계기 G-7 외상 회의에서 겐셔(Hans-Dietrich Genscher) 서독 외상은 소련 셰바르드나제(Eduard Amvrosivevich Shevardnadze) 외상을 접촉함.
 - 셰바르드나제 외상은 500명의 어린이들을 포함, 수많은 동독인들이 대사관 내에 임시 체류하고 있는 인도적 사정을 고려, 서독 입장을 지원
 - 겐셔 서독 외상은 체코, 프랑스 외상 등을 연쇄 접촉하여 지지를 확보하였고, 베이커(James Addison Baker III) 미 국무 장관으로부터는 체코 주재 미국 대사관 영내에 동독 난민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받음.
 -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이탈과 소련과 폴란드 등 동구권 개혁 운동은 동독 내 개혁을 촉구하는 촉매제 역할
- 1989.10.9 동독 라이프찌히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동독 공산당은 8천 명의 비밀경찰을 배치함. 대다수 관측통들은 중국 천안문 사태 진압 방식을 예상하였으나,

1989년 3월 네메츠 신임 헝가리 수상이 취임하였는데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하는 인사로서 헝가리를 통해 오스트리아(서방)로 가기 위해 동독을 탈출한 동독인들에게 헝가리 국경을 개방하는 결단을 내렸는데 베를린 장벽 붕괴의 서곡이었으며...

2) 브레즈네프 독트린(Brezhnev Doctrine): 1968년 11월 폴란드 공산당 제5차 대회에서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연설로 “사회주의 진영의 어느 나라든 생존이 위협받았을 때는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위협으로 간주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는 이에 개입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반혁명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군사개입도 할 수 있다는 제한 주권론

1989.10.9

동독 라이프찌히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동독 공산당은 8천 명의 비밀경찰을 배치했고, 대다수 관측통들은 중국 천안문 사태 진압 방식을 예상했으나, 무력 진압 방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독 주재 소련 대사관의 관여로 평화적 시위가 보장되었고...

여행 제한 문제가 재차 부각되어 동독 개혁 성향 공산 정부는 체코를 통해 서유럽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수만 명의 동독인 차량이 체코를 통해 서유럽으로 가기 위해 길을 메웠으며...

무력 진압 방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독 주재 소련 대사관의 관여로 평화적 시위가 보장되었음.

-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했던 호네커 동독 공산당 의장이 크렌즈(Egon Krenz) 동독 공산당 정치국원으로 1989. 10.17 교체되었는데, 크렌즈는 동독의 고르바초프가 되기를 원하던 인물

○ 동독 반정부측에서는 정치 경제 분야의 전면 개혁과 자유선거, 서방으로의 여행 자유 보장을 요구함. 1989.11.4 동베를린에서 5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로 개혁 성향 공산주의자인 모드로가 동독 정치국에 합류함.

- 여행 제한 문제가 재차 부각되었으며, 동독 개혁 성향 공산 정부는 체코를 통해 서유럽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수만 명의 동독인 차량이 체코를 통해 서유럽으로 가기 위해 길을 메웠음.

- 출국 비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 관련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동독인 수천 명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와, 마침내 장벽이 개방 (1989.11.9) 되었는데, 베를린 장벽 개방을 용인한 것은 크렌즈 동독 정부의 치명적 실수

- 동독 인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순간, 동독의 권력이 동독인들에게 이동

○ 동독 모드로 총리가 위기를 맞았는데, 동독 최고위층의 부정부패가 밝혀짐에 따라 1989년 12월 초 동독인들은 자유선거를 요구하였고, 동독 의회는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한 헌법 규정을 무효화 하였으며, 동독 정치국원과 모든 중앙위원들이 사임함.

- 동독 공산당 최고위 인사들이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체포 되었으며, 12.6 크렌즈가 국가수반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드로 총리만 남게 됨.

○ 시위대가 동독 주재 소련군 기지를 공격하는 일이 수차 발생 하였는데, 소련군 수뇌부는 자구적 보호 차원에서 동독 주재 소련군에게 긴급 비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서독 주재 소련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소련 정부는 독일 통일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연합 개념을 제시하면서, 쿨 총리 정부를 설득하도록 지시

- 1989년에만 340,000명의 동독인들이 서방으로 탈출하였고, 1990년 초에는 매일 2,000명의 동독인이 서독에 도착하였으며, 2.5~3백만 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떠날 준비를 함.

1989년에만
340,000명의
동독인들이
서방으로 탈출하였고,
1990년 초에는
매일 2,000명의
동독인이
서독에 도착하였으며,
2.5~3백만 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떠날
준비를 했으며...

다. 콜 서독 총리, 통일 실행 계획(10개 항) 발표

- 정치 개혁 분야에서 통일 문제를 제외시키려는 모드로 동독 총리의 의중을 간파한 콜 서독 총리는 통일 문제에 대한 정책 문서를 준비함.
 - 당시 서독인들의 여론은 대체로 독일 통일에는 찬성하였으나 시기는 10년 후 정도가 좋다는 여론
 - 동독 경제는 지속 악화되고 있었으며, 동독인들의 서방으로의 이탈도 지속되었는데, 1989.11월 한 달 동안 동독인 13만 명이 서방으로 탈출
- 콜 서독 총리는 독일 의회에서 아래 10개 항을 핵심 내용으로 연설(1989.11.28)함. 첫째, 동서독 간 여행을 쉽게 하는 조치를 취하며, 둘째, 동독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셋째, 동독에서 정치 경제 시스템의 근본 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동독에 대한 경제 지원을 확대하며, 넷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협력을 확대하며, 다섯째, 동독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된 후 동서독 간 연방 구조 문제를 논의하며, 전 독일을 위한 연방체제를 구성하되, 양독 국민들이 원할 경우에만 실현될 것이며, 여섯째, 양독관계 진전은 전 유럽 과정과 동서관계 틀 속에서 진행되며, 일곱째,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를 중동구 유럽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여덟째, 동서 경제 협력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이하 CSCE로 표기) 발전을 가속화하며, 아홉째, 무기 통제 분야 진전을 지원하며, 열 번째, 하나의 통일 국가로서의 독일 통일을 위한 '유럽 평화 질서' 모색을 위해 노력함.
- 콜 서독 총리의 독일 의회 연설은 대(大)성공이었는데, 동서독 내 통일 문제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이끌어 냈으며, 콜 총리의 서독 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였고, 서독 시민당의 지지도 확보하였음.

콜 서독 총리의
독일 의회 연설은
대(大)성공이었는데
동서독 내
통일 문제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이끌어 냈으며,
콜 총리의
서독 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였고,
서독 시민당의
지지도
확보해...

- 대내외 보안 유지를 위해 콜 총리는 겐서 외상에게도 연설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지만, 부시(George H. W. Bush) 미국 대통령에게는 사전에 알려 주도록 조치하였음.
- 미국 측은 콜 총리의 연설로 독일 통일 문제가 구체적 프로그램을 보유한 정책 어젠다로 격상된 것으로 평가

라. 몰타 미·소 정상회담(1989.12.2-3)

미 국가안보회의(NSC)는 몰타 미·소 정상회담에 임하는 부시 대통령에게 소련은 동구에서의 안보시스템에 일대 손상이 오기 때문에 독일 통일을 반대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통일 독일을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 미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몰타 미·소 정상회담에 임하는 부시 대통령에게 소련에 대한 평가를 다음 내용으로 보고함.
 - 소련은 동유럽에 대한 정책 통제를 상실했으며, 현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음. 소련은 동구에서의 안보시스템에 일대 손상이 오기 때문에 독일 통일을 반대하고 있음. 소련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로 표기)에 가입한 통일 독일을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음. 동독을 상실한 바르샤바동맹(Warsaw Pact)은 급격히 분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련의 방위선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시작될 수 있음.
 - 소련은 매우 비싸게 치른 2차 세계대전 승리를 통해 얻은 영토적 이익이 사라지게 됨. 소련은 영국, 프랑스와 협력하여 두 개의 독일이 지속되는 정책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임.
- 미국 측은 몰타 미·소 정상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동독에서 즉각적인 민주 개혁 조치를 요구하여 소련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되며, 독일의 통합을 지지하며, 소련 측이 요구한 4대국 평화 회의 개최를 지지하지 않음.
 - 독일 통합관련 서독 콜 수상의 10개 항을 지지하며, 통일 독일과 서독의 NATO 잔류가 유럽 통합 과정 심화에 편입되어야 하며, 유럽 국경선 준수와 관련하여 헬싱키 협약(Helsinki Final Act)³⁾ 지지

3) 헬싱키 협약(Helsinki Final Act): 1975.7.20-8.1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채택된 문서로 미국과 동서 유럽국가 등 35개국이 참석하였으며, 주권 및 현 국경선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주요 내용

- 통일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소련 측은 각국이 주권을 보유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유럽 공동의 집(common European home)’개념을 강조하고, 유럽 35개국이 참여하는 CSCE 개최를 주장하며, 독일의 장래 문제를 전 유럽 안보의 일환으로 토론하며, 두 개 독일 국가의 존재를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임.
-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면서, 두 개의 독일은 현실이며, 역사가 결정한 것임을 주장함.
 - 그러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몰타 회담에서 독일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의 반대 입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다고 당시 소련 군부가 주장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면서,
두 개의 독일은
현실이며
역사가 결정한 것임을
주장했고...

마. 콜 서독 총리, 동독 드레스덴 방문(1989.12.19)

-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냉랭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1989.12.19 드레스덴에서 모드로 동독 총리를 만나, 두 독일 국가 간에 사회·문화·경제 관계에 관한 새로운 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함.
 - 콜 총리는 동독의 안정을 위해 모드로 총리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두 지도자는 국경 통과를 위해 베를린 브란덴 부르크 문을 개방하고, 국경 통과를 막고 있는 남은 장애들을 크리스마스를 기해 제거할 것임을 발표
 - 콜 총리의 드레스덴 방문은 동독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는 기회
 - 독일 통일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미국과 소련 간 새로운 냉전 위기를 피하면서, 언제, 어떤 속도로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로 변화
 - 소련은 독일 통합 과정의 속도 완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2차 세계대전 전승 4대국 회의와 CSCE 회의 개최를 재차 주장
- 동독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져서, 1990년 1월에는 하루 평균 2천 명이 동독을 떠나는 상황이 되었음.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냉랭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1989.12.19
드레스덴에서
모드로 동독 총리를 만나,
두 독일 국가 간에
사회·문화·경제
관계에 관한
새로운 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해...

1990년 3월 18일에
 개최된
 동독 총선에서
 투표율이 93%로
 서독 콜 총리 방식
 통일을 주장하는
 독일 연합당이 48%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고,
 사회당은 22%,
 공산당은 16%를
 획득했으며...

EC 정상회의
 (1990.4.28-29,
 더블린)에서는
 경제 통화 통합을
 가속화하는
 노력과 함께
 유럽 정치 통합 추진에
 대한
 독일-프랑스
 이니셔티브가
 합의되었는데,
 동 합의를 계기로
 독일 통일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 콜 총리는 드레스덴 방문 시 동독이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감지하였는데, 동독 정부가 국가 채무를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도 그중 하나
- 1990년 봄까지 동독 상황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한 모드로 동독 총리는 동독 총선거를 1990년 5월 6일에서 3월 18일로 앞당기는 중대 결정

바. 독일 통일의 돌파구

- 1990년 3월 18일에 개최된 동독 총선에서 투표율이 93%였으며, 서독 콜 총리 방식의 통일을 주장하는 독일 연합당(The Alliance for Germany)이 48%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며, 사회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22%, 공산당은 16%를 획득하였음.
- 독일 연합당이 400석의 동독 의회에서 193석을 획득하여 사회당을 주니어 파트너(junior partner)로 하여 쉽게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서독 헌법 23조⁴⁾를 원용하여 서독과의 통합 모색 가능
- 3.18 동독 선거 결과는 소련에게 경악할 만한 소식
- EC 정상회의(1990.4.28-29, 더블린)에서는 경제 통화 통합을 가속화하는 노력과 함께, 유럽 정치 통합 추진에 대한 독일-프랑스 이니셔티브가 합의되었는데, 동 합의를 계기로 독일 통일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됨.
- 1990.5월 서독 정부는 동독 기민당(CDU: Christlich-Demokratische Union)의 드 미지에르(Lothar de Maiziere) 신정부와 동서독이 신속한 방식으로 통합한다는 원칙에 합의함.
- 5.5 서독 본(Bonn) 개최 '2+4' 외상회의에서 메켈(Meckel) 동독 외상은 통합을 질서 있고 신속하게(in an orderly way and without delay) 추진한다는데 합의
- 서독 헌법 제23조에 의거, 동독 흡수 합병 조치와 통일 독일

4) 서독 헌법 제23조: 동독의 모든 주가 동독 의회의 결정에 따라 서독 독일연방 공화국에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 3.18 동독 총선 결과, 통일 찬성 정당들이 2/3 이상의 득표를 하였음.

초대 총리를 선출할 전(全)독일 총선을 1990년 중 실시키로 합의

- 1990.5.4 서독 본에서 콜 총리를 면담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현금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미국은 소련의 대(對)리투아니아 정책 수정 및 소련 국내 개혁을 (현금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였음.

-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국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은 강조하면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미국 측에 설명

- ‘소련의 동의 없이는 독일 통일은 없다’는 소련 측 주장과 관련하여, 미국은 통일 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잔류를 확보하기 위해 아래 9개항(incentive package)을 제시함.

- 재래식무기감축협정(CFE: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이하 CFE로 표기)협상 이후 중부 유럽을 포함한 전 유럽 재래식 병력 규모 감축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단거리 핵무기 감축 협상 개시가 필요하고, 통일 독일은 핵무기, 생물 무기, 화학 무기를 생산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며, 미국은 동독 주둔 소련군이 철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서독에 제안하며, 미국 측은 변화된 유럽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NATO 전략 검토를 요청하며, 통일 독일의 국경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CFE 타결 조건 및 독일 통일의 새로운 유럽 상황 하에서 소련의 중요한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CSCE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미국은 소련의 개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일 독일과 소련 간 경제관계가 만족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미국 방문 (1990.5.30)시 통일 독일의 NATO 잔류 문제에 대해 결정적 진전이 있었는데 미국 측은 ‘모든 국가는 자신의 동맹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헬싱키 CSCE 정상회의 채택 원칙을 통일 독일에 적용하자고 소련 측에 제의한 데 대해, 소련 측이 동의하였고...

-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미국 방문(1990.5.30)시 통일 독일의 NATO 잔류 문제에 대해 결정적 진전이 있었는데, 미국 측은 ‘모든 국가는 자신의 동맹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헬싱키 CSCE 정상회의 채택 원칙을 통일 독일에 적용하자고 소련 측에 제의한 데 대해, 소련 측이 동의함.

- 워싱턴 미·소 정상회담에서는 미·소 무역협정 서명, G-7의 대(對)소련 경제 지원 등 소련측이 희망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진전

- EC 정상회의(6.25-26, 더블린), NATO 정상회의(7.5-6, 런던), G-7 정상회의(7.9-11, 휴스턴), 서독-소련 정상회담(7.15-16, 모스크바, 코커서스 스타브로폴)을 통해 최대 쟁점인 통일 독일의 NATO 잔류 문제가 확정되었으며, NATO의 변화와 개혁 방향이 정해졌고, 7월 1일 동서독 통화 동맹이 발효됨으로서 동서독 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가 해소됨.
- 서독-소련 정상회담(7.15-16, 모스크바, 코커서스 스타브로폴)에서 주요 현안들이 타결되었는데, 하기 내용의 합의(8개 항)를 발표하였음.
 - 통일 독일은 서독, 동독, 베를린을 포함하며, 통일이 되면 4대국의 권한은 종료되며, 통일 독일은 완전하고 무제한의 주권을 향유
 - 통일 독일은 CSCE 최종 의정서(Final Act)에 의거, 어느 동맹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됨. 통일 독일은 NATO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독 정부의 견해이며 콜 총리는 동독의 입장도 그러하다는 것을 확신
 - 소련과 통일 독일은 4년 내에 동독 주둔 소련군 철수를 이행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 소련과 서독은 통일 독일의 군대가 통일 직후부터 동독 지역에 배치될 수 있으며, 소련군이 철수한 1994년 이후 NATO군에 편입될 수 있는 것으로 합의
 - 소련군이 동독에 주둔해 있는 기간 동안 미국·영국·프랑스 서방 3개국 군대는 베를린에 지속 주둔
 -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콜 총리에게 2+4 회의 역할 종료 시, 4대국(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권한도 종료된다는데 동의
 - 소련 측이 서독이 약속한 30억 미불외에, 추가 경제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서독측은 G-7 휴스턴 정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실사를 거쳐 대(對)소련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대응
 - 통일 독일의 재래식 병력을 동독 주재 소련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1994년 시점에 맞추어 37만 명 규모로 감축
 - 통일 독일은 핵, 생물, 화학 무기의 저장과 사용을 포기하며,

통일 독일의
재래식 병력 감축을 위한
비엔나 협상과 관련,
통일 독일의
재래식 병력을
동독 주재 소련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1994년 시점에 맞추어
37만 명 규모로
감축하기로...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회원국 지위 유지

- 동서독 간 통합 조약(the unification treaty)논의를 위해 4차례 협의가 개최되었으며, 1990년 8월말 조약문에 대한 합의가 완료
 - 서독과 소련 간에는 3개의 조약 체결이 필요했는데, 첫째, 독·소 간 장래의 정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조약, 둘째, 동독의 소련에 대한 채무 처리를 위한 조약, 셋째, 동독 주재 소련군 문제와 소련군 철군 관련 잠정 재정 지원 조약
 - 1990.11.9 베를린 장벽 붕괴 1주년을 기념하여 본(Bonn)에서 독일과 소련 간 상기 관련 조약이 체결
 - 1991. 6월 폴란드와 통일 독일 우호 조약 체결
 - CFE는 1990.12.19 CSCE 파리 정상회의에서 서명
 - 동독 주둔 소련군 철수 소요 비용 지원 규모가 문제가 되었는데, 소련은 200억 미불을 요구하였고, 서독은 30억 미불을 제시하였는데,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콜 총리가 개입하여 약 100억 미불(150억 서독 마르크)규모로 결정
- 1991.12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창설을 위한 조약(Maastricht Treaty)이 서명됨.

1955년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는
동독과 국교를
수립한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힘을 통한 변화 정책’은
1969년까지
지속되었으며...

3. 독일 통일에 영향을 미친 요인

- 가. 서독의 동방정책은 당분간 독일 통일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정책
- 1955년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총리는 동독과 국교를 수립한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을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힘을 통한 변화 정책(change through strength)’은 1969년까지 지속되었음.
 -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의 영토를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영토로 규정, 전후 동독이 수용한 오데르-나이세(Oder-Neisse) 강을 경계로 한 폴란드와의 축소된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련, 폴란드, 체코 등으로부터 실지회복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음

미·소 관계가 변화하는 새로운 국제 상황에서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가
 1969년 서독 총리로 취임하여
 폴란드와의 오테르-나이세 국경선 인정,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
 동독과의 동방정책을 추진했으며...

보수 기민당은 서독이 정치, 경제, 군사 등 제반 분야에서 힘의 우위 정책을 견지하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 아데나워 총리의 대(對)동독 강경정책은 60년대에 시작된 미·소 초강대국 간 화해정책(Detente)에 적응하지 못하여, 미국과 불협화음을 시현하였고, 대(對)소련 외교에서도 한계를 노정함.
 - 1961년 11월 케네디(John F. Kennedy) 미국 대통령은 베를린 연설을 통해, ‘소련이 독일 통일을 허용할 뜻이 없으므로, 소련이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한 독일 통일은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고, 후르시초프(Nikita Khrushchyov)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흡족해함.
 - 아데나워 독일 총리는 젊은 미국 대통령이 독일의 분단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분개하였으며, 케네디 대통령은 아데나워 서독 총리를 냉전의 유물로 간주
- 미·소 관계가 변화하는 새로운 국제 상황에서,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가(Willy Brandt) 1969년 서독 총리로 취임하여, 폴란드와의 오테르-나이세 국경선 인정,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 동독과의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함.
 - 소련은 서독과의 관계 개선을 반대한 울브리히(Walter Ulbricht) 동독 공산당 서기장을 퇴진시키고, 두개의 독일 국가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소련의 입장에 호응한 호네커를 동독 지도자로 추대
- 동방정책은 독일 통일이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실상 두 개의 독일 국가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소련 입장을, 미국이 추인한 결과를 반영한 것임.
 - 서독은 분단 독일의 현실과 유럽의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1972년 12월 동독과 기본관계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서독에 대표부가 설치되었는데, 이로써 동서독은 두 개의 독일 국가의 존재를 인정(two states within one German nation)

나. 서독 보수 기민당, 진보 사민당 입장

- 보수 기민당은 서독이 정치, 경제, 군사 등 제반 분야에서 힘의 우위 정책을 견지하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음. 기민당은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중립화 요구를 거부하고, 친미,

친서방 노선을 견지하면서 민주 제도의 정착과 경제 재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 1955년에는 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NATO에 가입

○ 진보 사민당은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hmung)’ 정책을 지지하였는데, 소련, 동독과 화해 협력하고, 동독의 안정을 도우면 사실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었음.

- 외교정책 측면에서 서독의 NATO 가입을 반대하고, 소련의 CSCE 구상에 동조

- 사민당은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동서독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독일 민족의 동질성 유지와 분단의 고통 완화를 위해 노력

○ 16년간 집권(1982-1998)한 서독 보수 기민당 헬무트 콜 총리는 진보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을 승계, 추진하였음.

- 통일이 임박한 1989년부터는 부시(senior Bush) 미국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여, ‘힘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Kraft)’ 정책으로 방향 전환

- 서독이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의 정치체제(의원내각제)가 연립정부(聯立政府)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특성에 기인한 측면

진보 사민당은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을 지지하였는데 소련, 동독과 화해 협력하고, 동독의 안정을 도우면 사실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16년간 집권(1982-1998)한 서독 보수 기민당 헬무트 콜 총리는 진보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을 승계, 추진했으며...

다. 서독 정부, 동독 주민 삶의 질 향상 문제에 지속 관심

○ 서독은 동독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킨 추동력이 되었음.

- 서독 정부는 동독 내 인권 유린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대(對)동독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산가족 상봉, 사람에 관한 정보 교류, 동 베를린 단기 체류 허가 등 인적 접촉을 확대하고, 동독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중앙기록보존소를 설립

○ 사민당 브란트 총리는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의 기치 아래 ‘작은 보폭 정치(Politik der kleinen Schritte)’를 강조하여, 동독과의 통행

1975년 8월
미국과 소련 등
유럽 35개국이 참여한
CSCE에서 채택된
헬싱키 선언이
동유럽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주미 소련대사를
26년간 역임한
도브리닌 대사는
자신의 회고록
(In Confidence)에서
“헬싱키 선언은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에서
자유화 운동이 지속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결국 중동구 유럽
국가들에게
근본적 변화를 야기시켜
냉전이 종식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해...

협정과 우편 협정을 체결하여, 동독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

- 기민당 콜 총리 정부는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 조약에 인권 보호를 명문화하였으며, 1975년 서명된 헬싱키 선언 협상 시에는 이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주장

- 인권 논의로 시작된 교류는 기초 인프라 투자와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졌는데, 정치범 교환을 확대하고, 경제 차관을 제공함. 콜 총리는 경제 협력 대가로 동독으로부터 총살 행위 금지, 동독 지역 자유 여행, 동독 내 서독 방송 청취 허용 등 양보를 얻어내 동독 내 인권 상황을 개선

라. 미국과 소련, 헬싱키 선언 인권 규약 합의

- 1975년 8월 미국과 소련 등 유럽 35개국이 참여한 CSCE에서 채택된 헬싱키 선언이 동유럽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헬싱키 선언 인권 규약은 ‘인권 존중과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을 포함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포함
- 헬싱키 회의에 참석한 포드(Gerald Rudolph Ford)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헬싱키 회의가 합의한 원칙들을 유럽 문명의 위대한 유산으로 간주한다면서, 역사는 말한 것과 약속한 것으로 헬싱키 회의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과 약속 이행 결과로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인권 조항이 포함된 헬싱키 선언 초안을 소련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토론하도록 했는데, 수스로프, 포드고르니, 안드로포프 위원은 인권 조항을 받아드리면 국내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의 간섭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함.
 - 그로미코(Andrei Gromyko) 외상이 ‘내정 간섭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소련 정부뿐’ 이라고 주장하며, 헬싱키 선언 초안을 옹호하였고,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그로미코 외상 입장을 지지
- 주미 소련대사를 26년간 역임한 도브리닌(Anatoly Dobrynin) 대사는 자신의 회고록(In Confidence)에서 “헬싱키 선언은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에서 자유화 운동이 지속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결국 중동구 유럽 국가들에게 근본적 변화를 야기시켜 냉전이 종식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함.

- 도브리닌 대사는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면서, 소련과 동구권의 반체제 인사들은 반체제 세력의 현장이 된 역사적 문서(헬싱키 선언)에 크게 고무되었는데, 소련 지도층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주장

마.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개혁·개방 정책 추진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소련 내 정치적 기반에 손상을 주었고, 결국 소련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독일 통일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음.
-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추진한 신사고 정책은 위기에 처한 소련 체제에 대한 처방이었는데, 중앙집권적이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심각하게 군사적 구조였던 소련 경제 시스템이 문제였음.
- 소련 경제 시스템은 산업화 시기에는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1980년대 중후반 고르바초프 서기장 집권 당시, 세계 경제는 산업화를 지나 분권적 경제 구조와 아래로부터의 혁신, 급속한 기술 개발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음.
- 소련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미국 등 서방의 대소 봉쇄정책으로 인해 소련 경제가 세계 경제로부터 심각하게 고립되어 있었으며, 국제 경제의 핵심 체제(IMF, GATT)에 대한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인식도 제한적이었음.
-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소련 경제와 소련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소련 외교 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정치 경제적 고립을 끝낼 수 없다는 점은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음.
-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구상했던 범유럽안보시스템 구축은 서구도 동구도 아닌 ‘유럽 공동의 집’이었는데,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범유럽안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럽 냉전 체제의 상징인 나토(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Pact)의 양대 군사 동맹 체제가 대체될 수 있다고 판단함.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소련 내
정치적 기반에
손상을 주었고,
결국 소련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독일 통일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미국은

1983년 12월부터
중거리 핵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소련은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의
제로 옵션 입장을
수용하였으며...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소련 경제와 국력이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한
미·소 간 군비 경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해...

바. 레이건 미국 대통령, 대소련 봉쇄 정책 추진

- 소련의 SS-20 중거리 핵 미사일 유럽 배치(1979년)에 대응하여, 레이건 대통령은 제로 옵션(zero option) 입장을 고수하면서, 퍼싱 II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서독 배치 입장을 고수하였음.
 - 미국은 1983년 12월부터 중거리 핵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소련은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의 제로 옵션(zero option) 입장을 수용
 -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우주로부터 소련의 핵공격을 방어한다는 전략방어계획(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과 국방비 대폭 증액 계획을 발표하여 대소 봉쇄정책을 지속
 -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소련 경제와 국력이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한 미·소간 군비 경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음.
- 부시(senior Bush) 미국 대통령은 자유국가공동체(Commonwealth of free nations)를 대유럽 정책으로 제시(1989년)하였는데,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유럽 공동의 집' 개념에 대응하는 정책임.
 - 부시 대통령은 '봉쇄를 넘어서(Beyond Containment)' 개념을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제시하면서, 냉전은 유럽의 분할로 시작되었으며, 유럽 전체가 자유롭게(Europe whole and free) 되지 않는 한 '유럽 공동의 집'은 구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철의 장막과 베를린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설득
- 미국은 독일 통일 직전까지도 서독 배치 단거리 핵 미사일(Lance)을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서독 정부와 협의했으며, 소련과는 CFE협상을 추진함.
 - 1987년 12월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협정(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⁵⁾)에 합의
- 군사력은 자부심의 원천이며, 가장 훌륭한 성과 가운데 하나인데, 소련 국내 경제 하강이 가속화 될수록 군사 퍼레이드는 더욱 웅장해졌음.

5)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협정(INF):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협정에 따라 2000년까지 13년간 사정거리 500-3,000km 중거리 핵미사일 2,700기(러시아 1,846기, 미국 846기) 폐기

4. 한반도 통일 외교

- 통일은 한국민과 북한 주민의 결단에 의해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며, 중국이나 미국이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아님.
 - 통일 준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스스로의 경제적 능력과 군사적 역량을 키워야(富國強兵) 다양한 도전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한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의지와 열망이 중요
- 서독과 미국과 소련이 독일 통일 전 과정에 적극 관여했으며, 영국·프랑스와 동독의 역할은 수동적이었는데, 한반도 통일 과정도 한국과 미국, 중국이 주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 경험, 남북 분단, 동북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미동맹 강화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 통일을 위해 핵심적으로 중요한 전략
 - 한미동맹이 그냥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아무리 강고(強固)한 동맹도 관리하고 보살피지 않으면 낡고 형해화(形骸化)
 - 동맹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능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성의를 다해 상대를 이해 시키는 노력이 필요
-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한·중 관계가 긴밀해 지면 중국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동을 제어할 수 있으며, 둘째,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결정적으로 필요하며, 셋째, 한·중 간 경제 교역, 투자 규모가 커져 양국 간 경제적 이익이 중요해졌으며, 넷째, 황사·기후 변화 등 이웃 국가로서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임.
 - 중국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냐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북한의 생존을 중국이 담보(擔保)
 -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통일은
한국민과 북한 주민의
결단에 의해
달성해야 하는 과제로
중국이나 미국이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며...

서독과 미국과 소련이
독일 통일 전 과정에
적극 관여했으며
영국·프랑스와
동독의 역할은
수동적이었는데,
한반도 통일 과정도
한국과 미국, 중국이
주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과 중국 관계를
특수 국가관계로
볼 것인지,
일반 국가관계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미국은 일관되게
서독 입장을 지지하면서
소련, 영국, 프랑스 등
독일 통일 반대 국가들의
주장을 완화시켰고,
서독은 가능한 한
소련을 자극하지 않고
소련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해...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과 중국 관계를 특수 국가관계로 볼 것인지, 일반 국가관계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

- 북한과 중국 간에는 군사 동맹 조약이 존재하고 있는데, 북·중 관계를 일반 국가 관계로 규정한다면 중국은 북·중 동맹 조약을 절차를 밟아 폐기하고, 러시아가 2000년에 북한과의 동맹 조약을 폐기하고, 우호 선린 조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필요

-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미국은 일관되게 서독 입장을 지지하면서 소련, 영국, 프랑스 등 독일 통일 반대 국가들의 주장을 완화시켰음. 서독은 가능한 한 소련을 자극하지 않고, 소련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5. 정책적 고려 사항

-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상호 대응 과정 속에서 한반도 통일 과정이 어떤 모습과 형태를 띠어갈 것인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 1969년부터 서독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대동독화해 협력정책(동방정책)은 독일통일이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실상 두개의 독일 국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소련 입장을 미국이 인정한 결과로 만들어진 정책임. 이처럼 독일 문제는 변화하는 미·소 관계(대결정책으로부터 데탕트 정책으로)에 영향을 받았는데, 한반도 통일 문제도 미·중 관계 변화 추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1980년대 후반부터 미·소 관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독일 통합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는데,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개혁 정책, 레이건 대통령의 대(對)소련 봉쇄 정책, 서독의 현명한 통일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일 독일 완성
- 독일 통일 과정에서 소련과 영국, 프랑스가 통일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한반도의 경우에도 한반도 주변 4국 중 일부

국가가 통일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독일 통합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반대 무마를 위해 미국이 적극 노력함.

- 독일 통일 과정에서 소련은 대내적 요소(동서독 간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와 대외적 요소(통일 독일의 NATO 잔류 문제, 동독 주둔 소련군 철수 문제 등)를 분리시키고, 이태리, 벨기에,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 주변국과 평화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통합 추진 속도를 늦추려고 최대 노력
- 영국도 소련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동조하고 동독의 민주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프랑스는 유럽 통합 심화에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독일 통일에 소극적 입장 견지
- 독일 통일 과정에서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혁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한·중 정상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중요함.
 -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1960~1970년대 중국은 소련의 침략 위협에 직면하여, 소련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대전환을 모색한 바 있으며, 1980년대 후반 소련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동구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사례 등
 - 중국이 북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유기체와 같은 국가 간의 관계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본질을 간과
- 소련은 독일 통일 문제 협의를 위해 2차 세계대전 전승 4대국 회의와 CSCE 개최를 지속 주장했으나, 미국은 CSCE 개최를 위해서는, 동독 내 자유선거 실시와 CFE 체결을 통해 소련군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CSCE가 독일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회의로 전환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전승 4대국 회의와 CSCE 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지속 견지함.
 - 미국은 독일 통일 문제의 대외적 측면 관리를 위해 '2+4' 메카니즘을 제안하고 동 메카니즘을 통해 독일 통일 문제를 협의 했는데, 한반도 통일 문제 논의를 위해 6자회담과 별도의 포럼('2+2') 구상 검토 필요

1969년부터 서독 시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대동독화해협력정책(동방정책)은 독일통일이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실상 두개의 독일 국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소련 입장을 미국이 인정한 결과로 만들어진 정책이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혁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한·중 정상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중요해...

미국은

독일 통일 문제의
대외적 측면 관리를 위해
‘2+4’ 메카니즘을
제안하고

동 메카니즘을 통해
독일 통일 문제를
협의했는데,
한반도 통일 문제
논의를 위해

6자회담과
별도의 포럼(‘2+2’) 구상
검토가 필요하며...

독일 통일을
이끌어낸 동력은
동독을 떠나겠다고 한
동독인들이었으며
결국 사람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 서독의 대(對)동독 정책이 일관되게 동독인들의 삶의 질 개선 문제에 중점을 둔 것처럼, 한국의 대북한 정책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문제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고, 원조보다는 무역에, 정부보다는 민간에게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 독일 통일을 이끌어낸 동력은 동독을 떠나겠다고 한 동독인들이었으며, 결국 사람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탈북자들을 통해 남한의 상황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
- 1988년 동독 내 상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당시 동독을 방문했던 서방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였는데, 단기간 내 동독 상황이 변한 것처럼,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서독이 동독과의 기본 관계 조약 체결과 일관된 대(對)동독 정책 추진을 통해 동서독 관계를 잘 관리한 것과 같이, 한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이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경우, 한국이 통합 과정을 주도할 수 있음.
 -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 관계를 다차원적인 파트너쉽과 함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 의존 관계로 대체시킬 필요
 - 북한이 체제 정당성 유지를 위해 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적을 만들 필요가 적어지고, 체제 정당성 유지를 위해 경제 성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활로 모색이 용이해 질 수 있음.
 - 남북한 관계가 정부간 거래(지원)보다는 상업과 민간 교류에 더 의존하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경제적 미래 비전에 대해 다자간 합의에 도달하는 노력이 중요
 - 한국과 중국이 북한 경제 시스템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제도 변화를 격려할 필요
 - 북한의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보면, 최선의 통합 형태는 영공 비행권이며, 차선의 통합 형태는 가스 파이프 라인과 철도이며,

- 세 번째로 바람직한 통합 형태는 개성 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형태
- 북한의 관점에서 최악의 통합 형태는 현재의 중국처럼, 기회를 엿보는 한국 사업가들과 전면적인 개방 관계를 맺는 것임.
 -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서독은 동독과의 평화 협정 체결을 반대하였으며, 소련과 동독, 영국은 평화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한반도의 경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고, 한반도가 정전체제인 점 등은 동독과 다른 상황임.
 -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동결과 국제기구 사찰 조건으로 평화 협정 협의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는데, 평화 협정은 미래에 대한 탐색적 토론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장기적 안정을 위한 주요 수단
 - 평화 협정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북한의 핵 포기과 평화 협정을 교환하는 어젠다 설정에 대한 검토 필요
 - 통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통일 독일의 NATO 회원국 지위 유지 입장을 관철시켰는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한미동맹, 주한미군 관련 입장 관철이 필요함.
 - 서독은 폴란드와의 국경선(오데르-나이세) 준수 입장을 통해, 인접국을 안심시켰는데, 북·중 국경 준수 입장을 주변국에 알릴 필요가 있음.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동결과 국제기구 사찰 조건으로 평화 협정 협의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는데, 평화 협정은 미래에 대한 탐색적 토론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장기적 안정을 위한 주요 수단이며, 평화 협정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북한의 핵 포기과 평화 협정을 교환하는 어젠다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2014. 4. 11

토론: 교 수 김동열
교 수 이지용
평화체제과장 김영완
편집: 연구원 황선희